

## [ 종합·해설 ]

한나라당 경선 후 어떻게 되나

# 패자 선택따라 분열·화합 갈림길

**득표차 많을땐 패자 경선 불복 힘들 듯  
대선 앞두고 정파별 각개 약진 가능성**

19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마무리됐다. 20일 오후에는 경선을 통해 선출된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공식 발표된다.

누가 한나라당 후보가 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지만 패자의 선택에도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선결단식의 지속한 경선이 치러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선 불복 가능학=그러나 패자가 경선 불복까지 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직자 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선 불복 이후 탈당 등의 수순을 밟아 독자 출마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가 수차례 걸쳐 경선 승복을 밝혔다는 점에서 경선 불복의 명분이 크지 않다. 특히, 경선 불복 논란은 당내 분열로 이어져 정권

교체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패자 측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또한, 패자 측이 경선 불복을 선언하고 탈당을 결행한다 해도 18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동참할지도 미지수다. 한나라당의 역학구도가 급격히 승자 측으로 기울면서 패자 측의 반발이 '찻잔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분열 가능성도=정치권에서는 경선 패자는 당에 머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국의 유동성이 큰 만큼 주후 정국 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내부의 기득권 확보에 나설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에서는 별씨부터 '후보교체론'을 기반으로 하는 '10월 위기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리품을 행기려는 승자 측 의원들과 18대 총선의 지역구 확보를 위한 패자 측 의원들이 충돌할 경우 한나라당은 대선을 앞두고 여러 정파로 갈려 각개 약진하는 분열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패자 측이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승자 측이 과감한 화합 방안을 내놓는다면 후보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며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 투표가 실시된 19일 광주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거인단에 뽑힌 시민들이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 ■한나라 경선투표 이모저모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투표가 전국 248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 19일 부산과 인천, 울산 등 곳곳에서 기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활용하는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광주·전남에서도 대의원과 당원, 일반 국민 등 선거인단의 휴대전화로 투표를 도려하거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수신건식이 전송되는 등 과열·혼탁양상을 보였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 부산진구에서 40대 여성 1명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기표 결과가 기록된 기표 용지를 활용한 사실이 적발된 데 이어 인천

## 기표용지 촬영 부정행위 곳곳서 적발 논란 “나에게 한표를” 문자메시지 쏟아져 짜증

남동구와 울산 남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포착됐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측은 이날 적발된 기표용지 휴대전화 촬영 사례를 두고 서로 상대방이 부정투표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 전 시장측은 인천에서 적발된 박모 씨의 경우 박 전 대표 적극 지지자라고 주장한 반면, 박 전 대표 측은 부산에서 적발된 강모 씨의 경우 이 전 시장 핵심 측근 의원의 장인이 경영하는 식당의 여종업

원이라고 이 전 시장측을 겨냥했다.

○~이날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각 후보 캠프는 대의원과 당원, 일반 국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거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건을 잇따라 전송, 선거인단의 불만을 샀다.

광주 동구청 제1회의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대의원 H씨(50)는 기자에게 각 후보 캠프가 전송한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시도때도 없이 들어오는 메시지 때문에 대의원인 나도 짜증나

는데 일반 국민 선거인의 경우 오죽 하겠느냐”며 과열 경쟁을 비판하기도 했다.

○~광주·전남 각 투표소 입구에는 박 관용 경선관리위원장 명의로 ‘언론사의 출구조사에 응하지 말라’는 안내문이 내걸려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측은 안내문을 투표장 출입구뿐만 아니라 선거인단의 이동 경로에 모두 붙여 놓았으며 선거인단에게 출구조사에 응하지 말 것을 직접 당부하는 등 출구조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당 관계자는 “설부를 예단과 혼선을 막기 위해 여론조사기관들의 출구조사를 자체해달라는 협조를 각 언론사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현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화석 출판기념 개막(桂馬)작방

우석연, 단주 번역 출판기념 축하식

山水甲天下  
여행의 산수와 문학의 세계

개막(桂馬)작방

**(주)조이트레블**  
234-3222

299,000
429,000
449,000
599,000
379,000

문화전당 내부주차장 왜 줄여야 하나

출입구 한곳뿐… 교통대란 우려  
매연·소음으로 공원기능 상실

문화전당 내부주차장 규모를 줄려싼 논란은 최근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다시 촉발됐다.

광주·전남 행복발전소(전 광주·전남개혁연대)는 최근 문광부의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 공청회를 앞두고 문광부와 광주시에 전당 내부 주차장을 축소할 것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접수했다.

지역 시민단체와 건축 전문가, 동구 비대위 등도 내부 주차장을 100대(최대 200대) 정도로 줄여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문광부는 주차장법 상 확보면적이 600대 정도인 점과 100대로 축소할 경우 필요한 설계시 애로 및 공기 연장, 외곽주차장 확보 예산 증가 등으로 인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내부주차장 왜 줄여야 하나=‘600 대 100(최대 200)’. 문광부와 광주 지역 사회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문화전당 내부 주차장의 면수다.

시민단체 등은 600대 규모의 과도한 내부 주차장은 교통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 설계상 내부 주차장 출구는 전남대 병원 쪽에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수백대의 차량이 물밀 경우 교통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시민공원 및 친환경설계가 장점인 문화전당은 찾은 차량출입으로 인한 매연과 소음 등으로 폐적성을 상실하게 된다.

내부 주차장 축소와 외곽 주차장 확대는 문화전당 주변의 충장로와 금남로, 예술의 거리, 광주 천연 등 도심 전체를 재생시키는 프로젝트이다.

◇내부 주차장 축소 가능하다=광주·전남 행복발전연구소는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특별법에 주차장법에 관한 예외 조항을 추가하면 된다. 하지만 특별법 통과시 유사 법률을 추진 중인 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점과 예외 조항 하나만 가지고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문화전당을 주차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는 조례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주차제한구역으로 설정해 주차 차량과 주차 대수 등을 규정하면 내부 주차장을 최소 100대에서 최대 200대 이하로 줄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문광부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해법을 알고 있다. 하지만 시는 내부 주차장을 축소한 이후, 외곽 주차장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돌아올 책임 소재로 인해 문광부 안을 따르고 있다.

광주·전남 행복발전소 정재훈 이사장은 “정부가 외곽주차장에 대한 약속을 명확히 하고, 시는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 내부 주차장을 축소하는 것이 문화전당의 기능을 살리는 길”이라고 협력을 제시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